

25.10.01.(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3631 /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10-6436-1726 / 오재현 선임비서관(민병덕 의원실) 010-2763-5393

민생회복 최우선, 죽지 않는 일터, 갑질 없는 공정거래를 위한 을지로 국감을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월)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민생과 경제에 무관심했던 윤석열 내란 정권은 탄핵됐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 그들이 깊게 파놓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을'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자영업자, 위험을 무릅쓰고 빚길을 달리는 라이더, 방학이면 월급을 못 받는 급식실 조리사, 600일째 고공 농성장에서 복직을 외쳤던 노동자. 이들의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사투입니다.

배달플랫폼의 수수료는 내릴 기미 없이 오르기만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광고비를 떠넘기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중소기업의 희망을 앗아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집을 잃은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외투기업은 혜택만 누리며 노동자들의 고용에는 무관심합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이라는 이유로 폐암에 걸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세상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외로이 스러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코로나 이후 아직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치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을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민생소비 쿠폰 지급 등 경기부양책으로 일부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인상이 수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 그 의미는 특별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야당의 공세나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 대응하기보다,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늘 그렇듯 을지로위가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가 집중할 민생과제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자, 자영업자, 투자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의 뇌관 MBK-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알리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MBK는 2015년 7조2천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대규모 차입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한 무리한 경영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매출은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못했고, 대규모 점포 폐점 계획 발표로 시장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심화됐고, 입점점주 피해, 전자단기채권 투자자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MBK의 민생경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생계가 무책임한 기업 경영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겠습니다.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자영업자 비중이 꾸준히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2%를 넘어서는 한편, 폐업률마저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달플랫폼 불공정 행위는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배달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전반의 신뢰 붕괴라는 연쇄적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이츠는 음식배달에 그치지 않고 장보기·쇼핑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쿼터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앱을 통해 확보한 시장 지배력과 데이터, 배달 인프라를 활용해 다른 영역까지 잠식하려는 시도로, 겉으로는 서비스 다각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형태의 끼워팔기에 불과합니다.

배달플랫폼들의 약관법 위반, 자사 우대,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가맹점·대리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본사가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광고상품을 강제 유지하고, 직영몰에서는 가맹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역차별을 초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들의 현실은 더욱 고단합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가게를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본사는 지원금을 줄였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이 겹치면서 매출은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 하루 손익분기점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도폐점하는 점주에게 오히려 위약금을 부과하여 자영업자를 한 번 더 죽이고 있습니다. 본사의 불공정 계약과 가맹본부 중심 구조로 인해 점주들은 협상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동일 본사가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며 점포 간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다브랜드 체제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리점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 반품 제한, 과잉재고 떠넘기기와 같은 전형적인 갑질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약 형식을 변형해 법 적용을 회피하는 유사대리점 문제는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 제재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주 사전동의제와 표준계약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을지로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본사의 이익 추구에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가맹·대리점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생경제의 토대를 지켜내겠습니다.

넷째,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라이더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나, 그 마케팅 비용을 입점 외식업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에 선택권조차 주지 않은 채 배달료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 역시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는 대신 포장수수료를 유료화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CPC 광고는 유지하는 등 수익성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년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으로 독일 모회사에 환원된 금액만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양사 모두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와 관련해 가격 조작·허위 광고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외식업체들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외식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8.9%까지 떨어졌고, 그 주된 원인은 배달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입니다.

배달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입점업체, 배달라이더, 소비자, 그리고 플랫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을지로위는 입점업체와 배달라이더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다섯째, 기술탈취라는 법 위의 갑질을 끝내고, ‘을’의 권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고도, 법정에서는 증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두 번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11.1%에 불과하며, 손해배상도 대부분 법관 재량에 의해 낮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설사 승소한다 해도 손해액 인정률은 청구 금액의 평균 17.5%에 그쳐,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곰표 밀맥주’로 알려진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의 분쟁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피해액이 수십억 원으로 산정됐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역소송으로 맞서는 태도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을 짓밟기’ 행태입니다.

협업을 가장한 탈취, 책임을 회피한 배신이 바로 기술탈취의 민낯입니다. 피해자가 입증에 실패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법 위에 서는 이 기형적인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제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을’의 권리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을지로 위는 국정감사와 입법을 통해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여섯째,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외면에 상처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해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과 최저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LH 피해주택 신속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피해주택 경공매 속행 지원, 인력 확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지역 기준 조정 및 상향 등 법 개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일곱째, 외투기업과 태배과로사 등 노동 문제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600일간의 고공농성을 불러온 한국유타칼하이테크 사례에서 보여진 외투기업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본 니토그룹의 한국법인 한국유타칼하이테크는 2004년 단 220억을 구내에 투자하여 2021년까지 18년 동안 총 7조7천10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같은 기간 1천983억원의 세후 이익을 올렸지만, 22년 공장전소를 이유로 산업을 일방 철수하고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같은 니토그룹의 또 다른 한국법인인 니토옵니칼은 폐업한 한국유타칼하이테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며 심지어 채용인원을 늘렸지만, 7명 남은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에게 주어진 토지 무상임대, 각종 세제 혜택은 우리 국민의 고용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득은 누리고 고용 책임을 쉽게 회피하는 불합리한 외국인 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현안 사업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온라인 물류 경쟁의 이면에 가중되는 장시간 야간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야간노동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인정한 보건상의 유해요인입니다. 하지만 쿠팡 등 주요 물류기업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업체마다 이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야간노동은 어느새 택배 노동자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지난 2021년 택배업계, 화주, 소비자, 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공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만, 큰 성장 중이던 쿠팡은 이 합의에 빠져 있어 몇 년이 지나자 한계가 노출됐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고 을지로위가 추진 중인 중인 쿠팡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국정감사에서는 과도한 야간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아خم제, 학교 급식 비정규직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급식 관련 학교 비정규직은 6만 6천 명 이상으로, 전체 교육공무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방학 중 비근무자 비율은 조리원이 98.9%, 조리사가 90.3%로, 방학만 되면 ‘사실상’ 무급휴직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기 중 300만 원 안팎이던 급여가 방학에는 7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며, 생계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생계 차원을 넘어, 학교 급식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위협합니다. 과중한 노동 강도와 낮은 처우 탓에 신규 인력 충원은 어려워지고, 조기퇴사도 늘어나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품질 저하, 파업과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한 급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습니다.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만 175명의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지난 9월 22일에

도 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질병 사망도 분명 산업재해이지만, 폐암으로 세상을 떠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세간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을지로위는 이 문제도 깊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열재, 마지막 남은 고공농성, 세종호텔 고공농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세종호텔 노사 분규와 관련하여 7개월 넘게 이어진 고공농성의 평화적 해소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책임 있는 중재와 신속한 현안 조정을 당부하며, 상호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종호텔 고공농성 장기화의 원인이 문제 해결을 회피한 세종대학교 이사회에 있는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교육부에도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사립대학이 사회적 갈등 적극 해결에 나서서 지도·감독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을지로위가 언제나 민생정치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참고] 2025 국정감사 乙을 위한 민생과제 발표 기자회견 기획안

□ 취지

-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MBK-홈플러스 사태, 플랫폼 불공정, 기술탈취, 가맹점·대리점, 택배·배달앱 문제, 전세사기,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 세종호텔 고공농성 등 현안 해결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을지로위원회는 위 민생과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4. 10. 1.(수)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진행순서

(사회자 :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시간		내용	비고
10:20~10:22	2분	참석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10:22~10:40	18분	기자회견문 낭독(각 주제별 의원 낭독) 낭독1: 민병덕 의원 - MBK-홈플러스 낭독2: 진성준 의원 - 플랫폼 불공정 낭독3: 박지혜 의원 - 가맹,대리점 낭독4: 이강일 의원 - 배달플랫폼 낭독5-6: 송재봉의원 - 기술탈취, 전세사기 낭독7-8: 이훈기 의원 - 외투기업, 택배 과로사 낭독9: 김문수 의원 - 학교 급식 비정규직 낭독10: 전진숙 의원 - 세종호텔 고공농성	-
10:40		- 마무리	-